

입법회의의장(NLA), 다음 주 중 3 측의 공동위원회 설립 예정, 후속 법률안 부결은 어려워 보임

입력 2018.02.13 (12.04)



2018년 2월 8일 - 입법회의의장은 다음 주 중 3 측의 공동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으로 후속 법률안이 부결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할 필요없이 공동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폰펫 위치촌라차이 입법회의의장은(NLA) 헌법기초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의 선거 관련 법률인 하원의원선거법안과 상원의원법안의 쟁점을 심의하기 위한 3 측의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음을 밝혔다.

헌법기초위원회는 하원의원선거법안 중 특히 장애인의 투표권을 위한 전자투표 도입 제안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쟁점으로 이야기 할 것으로 예상되며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오락모임과 무도회를 개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헌법기초위원회는 상원의원선거법안에서 3 가지 주요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1. 상원의 단체를 변경 2. 단체의 구성 3. 직접 또는 교차선거방법으로 다음 주 3 측의 공동위원회 설립 첫번째 단계로써 내일 (2018년 2월 9일) 위의 내용의 법률 안을 입법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동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법률 내용을 재검토 하자는 모든 측의 동의 및 기존 의견을 완화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입법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의 일부는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회의는 처음부터 하원의원선거법안과 상원의원법안 두 법률 모두를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없다고 보고 공동위원회 단계에서 변경한 이후 만약 어떤 쟁점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 입법회의의 권한으로 헌법재판소에 심의를 맡길 예정이다.

공동위원회 심의 이후 입법의회에서 법안을 부결할 우려에 대해서 입법회의의장은 비록 회원들의 권리 이기는 하나 입법회의위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서로 간의 의견차이가 좁혀 지기 시작했기에 부결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믿고 있으며 또한 총선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 부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었다.

태국 하원사무처 국회 방송국

아루니 판삭다/기자/편집

태국 하원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 일본어 한국어과

솨자이 통쿤/번역